



# “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5개 소추 사유 전부 수긍...‘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 인정  
尹 제기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내란죄 철학 문제 없다, 소추 적법”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현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균형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와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이력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현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현재는 이른바 ‘출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위법·부당하더라도 현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

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현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현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고집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현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에게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준형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박승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4월 4일 헌법재판관 8명

탄핵인용	탄핵기각
8	0

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학’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령·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현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尹, 계엄사태로 3년 못 채우고 단명

용산시대·4+1 개혁 추진  
의정 갈등 등 논란 초래  
김여사 의혹에 줄곧 발목  
여소야대 협치도 못풀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중수를 들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제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고, 소극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제인 정부와는 철저히 다른 길을 가려 했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4+1 개혁’을 가치로 내걸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 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을 본격화했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세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시행했으며,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1 개혁’의 일부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제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서울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3국 간 공조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 회의를 계기로 일대에서 ‘준동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투 병력을 파병하면서 북-러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진 한미-한미일 간 공조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서방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을 뒤흔들고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협상·논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외교에 나서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대통령 윤석열 파면 시·도지사 반응

#### 강기정 시장 “위대한 시민이 민주주의 지켜”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위대한 시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 시민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통해 “가장 위대한 내란 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며 “극우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산 하나를 넘었다. 이제 ‘더 단단한 민주주의’라는 산맥을 넘어야 한다”며 “파면을 넘어 ‘민주 정부’ 수립과 ‘사회 대개혁’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치는 사라지고 정치 보복만 남았고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의료와 교육 현장의 대혼란 등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3가지의 의견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먼저 “땅에 떨어진 국력과 국가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유능한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을 배우고 기억한 시민들이 계엄을 막아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더 많은 민주주의자를 키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



#### 김영록 지사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 도약”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한 것과 관련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구국의 혼을 가진 우리 전남도민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목포에서, 순천에서, 서울 광장에서, 트레터를 들고 남태평양을 넘어 농민들까지, 모든 이들의 열정과 참여가 헌정 수호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 준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며 “전남도는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당당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조기 대선이 짧은 기간 내에 치러지는 만큼,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선거가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헌정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차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